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사회이동성 관련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전문가 자문

☐ 과제명

[일반25-005-00]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 출장기간

- 2025.06.15(일) ~ 2025.6.21(토)

☐ 출장국가(도시)

- 네덜란드(아인트호벤), 벨기에(브뤼셀), 영국(옥스포드, 런던)

☐ 출장자

- 김문길 연구위원, 김기태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① 6/16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Grand Cafe Lichttoren	서효진 Tilburg대 박사	- 벨기에, 네덜란드의 사회이동성 - 벨기에, 네덜란드의 사회정책 동향
② 6/17	벨기에 (브뤼셀)	Café Bogard	Lafleur Jean-Michel 리에쥬대 교수	- 유럽사회에서 이주민의 사회이동성 -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권 자료를 종합한 MiTSopro 프로젝트 문의
③ 6/18	영국 (옥스포드)	Goldthorpe 교수 자택	John Goldthorpe 옥스퍼드대 교수	- 사회이동성 관련 학계 동향 - 사회이동성 관련 이론적 논의
④ 6/19	영국 (런던)	HM Treasury 건물	Rosa Alonso (Lead Analyst) Jonathan Smith (Senior Advisor)	- Social Mobility Commission의 역할과 한계 - 영국 사회에서 사회이동성 관련 논의

①	인터뷰 1
회의 개요	• 대상자: 서효진 박사(네덜란드 Tilburg대) • 일시: 6월 15일 정오 • 장소: Grand Cafe Lichttoren, Eindhoven 
회의 내용	Q: 네덜란드에서의 주거 문제와 극우화 현상의 연결은? A: 브렉시트 이후 네덜란드 대학이 유학생 유입을 늘리면서 주거 수요가 급증했으나,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임대료 상승과 주거난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며 극우 정당 지지율이 상승했고, 대학들은 네덜란드어 수업 확대 및 영어 강의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Q: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일자리는 성과와 한계는? A: 네덜란드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고, 이를 '정상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대부분 육아 부담을 진 여성들이 선택하며, 사회보험 외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파트타임 전환은 성별 임금격차와 전통적인 젠더 역할분담의 결과로, 진정한 자율 선택이라 보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Q: 벨기에의 가족주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A: 벨기에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강한 가족 중심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주말마다 집에 가는 등, 가족과의 정서적, 물리적 연결이 강하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독립이 지연되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 이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동시에 벨기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갖는 경우가 흔하며, 법적 결혼보다는 사실혼 형태가 일반적이다. Q: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사회정책과 실업급여 개편 논의는? A: 벨기에는 연방-언어권-지역정부 간 복잡한 권한 분배 구조를 가지며, 최근 우파 연정 정부가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을 축소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사회복지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연방정부 권한도 언어권별로 이전되면서 제도 간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Q: 플랫폼 노동과 정책 대응은 어떤 상황인가? A: 플랫폼 노동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은 상이하며, 실제로는 비정규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본질을 '비임금 노동'으로 보며, 대기 시간, 프로필 관리, 고객 대응 등 노동시간 외 활동까지 포함한 전반적 노동환경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벨기에의 노동시장 안정성은 어떤가? A: 벨기에는 강한 노조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졸업 이후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직종 간 임금 격차도 비교적 작고, 진로 선택이 다양

	하다. 다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아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했으나 실패했다. Q: 벨기에의 교육제도는 사회이동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A: 벨기에는 대학입시에 시험이 없고, 가까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미 대학 진학 트랙과 직업교육 트랙으로 나뉘며, 이민자 출신 청소년은 직업교육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일단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대학 간 서열이 거의 없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후속 학업도 가능하다. Q: 유럽 사회의 봉건적, 중세적 귀족적 전통과 계급의식은 어떤가? A: 유럽에서도 영국은 귀족제, 계급의식이 여전히 강하며, 옥스포드·캠브리지 등 엘리트 교육기관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류층이 재생산된다. 이에 비해 벨기에는 왕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귀족 계급의 권위는 약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계층 상승 욕망이 크지 않으며, 정규직 일자리의 조건이 유사하므로 상향이동의 동기도 약하다. Q: 사회이동성이 낮은 원인은 계급문화의 고착인가, 불평등인가? A: 영국의 경우, 불평등 수준이 높고, 계급 간 문화가 단절되어 있어 상향이동이 어렵다. 워킹클래스 정체성이 강하며, 교육, 문화, 언어에서부터 차별과 배제가 존재한다. 반면 벨기에는 격차가 작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이어서 상승 욕구 자체가 약하다. 따라서 사회이동성의 저하는 불평등의 크기뿐 아니라, 계급문화의 존재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②	인터뷰 2	 (주: 사진 촬영하지 않아서, Lafleur 교수 이미지로 대체)
회의 개요	• 대상자: Lafleur Jean-Michel 리에쥬대 교수 • 일시: 6월 17일 오후 3시 • 장소: Café Bogard, Brussel 중앙역	
회의 내용	Q.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권 자료를 종합한 MiTSopro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2015년경부터 유럽 내 이주민의 사회보장 접근권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직감을 가졌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내 자유이동을 통해 이동한 유럽 시민들조차 복지제도 접근에서 제한을 받으면서, 기존의 제도 설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제3국 출신 이민자의 권리가 쟁점이었으나, 유럽 시민의 이동과 복지접근이 충돌하면서 이는 학문적·정책적으로 중대한 쟁점이 되었다. Q.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A: 이 프로젝트는 약 1,500만 유로(€15 million) 규모로, 두 개의 주요 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간 비교 작업이며, 둘째는 민족지학, 사회학, 인류	

학 등의 접근을 통해 실제 이민자가 권리에 접근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정성 연구였다. 서류상의 권리와 실제 사용되는 권리 사이의 간극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 중 하나였다.

Q. 공개된 데이터 외에 더 많은 자료가 있는가? 향후 공유 계획이 있는가?

A: 현재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수집 데이터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문가를 고용해 매우 상세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아직은 엠바고 기간이라 외부 공유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엠바고가 곧 종료될 예정이므로, 향후 일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공유 조건과 범위는 논의 중이다.

Q. 본 프로젝트의 범위를 한국이나 미국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A: 기술적으로 확장 가능하다. 시각화 도구는 엑셀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국가별 행(row)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지도로 확장할 수 있다. 김기태 박사가 제공한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는 요약이 잘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다른 국가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우리 데이터는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매우 환영한다.

Q. 이민자의 사회보장 접근권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A: 이민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 전체"라는 범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난민, 유학생, 노동자, 무국적자 등 각 집단이 처한 제도적 조건을 분리해서 검토하고, 그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민자 구성(profiles)을 먼저 파악하고, 누가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Q.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s)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미등록 이민자는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배제보다는 현실적인 포섭이 필요하다. 벨기에의 경우, 긴급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등록 이민자는 강제로 추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이나 보건 등 여러 공공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세금 부과 및 공공서비스를 조정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Q. 사회보장제도는 이민자의 기여 여부에 따라 접근을 제한해야 할까?

A: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일반재정(세금)을 통해 운영되므로, 이민자도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거주기간 이후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18세가 된 청소년은 소득 기여 없이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Q. 이민자의 해외 재산 보유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급여 자격 심사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이는 국제적으로도 쟁점이다. 일부 국가는 OECD의 자동정보교환제도(AEOI)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파악한다. 한국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신국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중국처럼 협력에 제한이 있는 국가와의 정보 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Q. 복지이주의 역설(progressive's dilemma)에 대한 의견은?

A: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는 관대하되 신규 유입은 제한한다"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국경 폐쇄는 효과가 없고, 비극과 불법을 양산한다. 따라서 이민 흐름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권리 보장을 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단지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공동번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다. Q. 시민권(nationality)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무슨 뜻인가? A: 과거 시민권은 사회통합의 상징이자 이민자의 권리 확대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배타적 권리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보다는 정치적 보수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권 확대가 노동시장 참여,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A: 복지 남용(fraud)에 대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해서 제도 전체를 차단하거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 오히려 이민자가 국가에 기여하는 범위를 보여주고, 그에 걸맞은 권리를 설계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당과 학계가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극우 담론이 주류로 부상할 위험이 크다.
③	인터뷰 3
회의 개요	• 대상자: John Goldthorpe 교수 (옥스포드대) • 일시: 6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Goldthorpe 교수 자택 (North Oxford, 32 Leckford Road, Oxford) 
회의 내용	Q: 1960년대 이후 계층 연구의 핵심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A: 초기 Glass는 이동성 테이블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나 교육의 효과를 다변량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Duncan은 교육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부모 계층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인과적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설명하며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귀분석은 집단 간 이질성(disaggregation)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Goldthorpe는 범주형 변수를 유지하는 계층 모형을 개발했다. 이후 로지선형 모형(log-linear model)을 통해 절대이동과 상대이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한 유동성 가정(constant social fluidity model)과 이를 확장한 multiplicative-unidiff model을 제시하며 계층이동 연구의 통계적 토대를 혁신했다. Q: 상대이동을 측정할 때 소득보다 계층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계층은 단순한 현재 소득 수준 이상을 포착할 수 있다. Goldthorpe와 동료들은 동일한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해 소득 5분위 테이블과 계층 테이블을 비교하였고, 계층 지표가 부모와 자녀 간 지위 연관성을 더 강하게 설명함을 확인했다. 이는 계층이 단순한 수입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 장기적 소득 전망, 실직 위험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층은 삶의 전반적 위치를 설명하는 구조적 지표이며, 동일한 수입 수준이라도 고용형태, 직업 안정성, 미래 기회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계층이동 연구에 더 유효하다. Q: 교육 투자 확대가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왜 문제가 있는가?

A: 교육이동성은 제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다. 전후 영국은 중등·고등·대학 교육의 대폭적인 확장을 이뤘으나, 계층별 교육 격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상류층 부모들이 제도 변화에 수동적이지 않고, 사교육, 좋은 학군 내 주거 선택, 입학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확대는 중상류층의 전략적 대응에 의해 효과가 상쇄되기 쉽고, 교육을 통한 평등은 정치적 갈등을 동반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Q: 어떤 정책이 사회이동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A: 보편적 교육 투자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타겟팅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예컨대 'Sure Start'(취약지역 영유아 통합 프로그램)나 '교육유지수당(EMA)'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지속을 도왔으며, 실질적인 개선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 저항에 직면했으며, 2010년 이후 예산 삭감 또는 폐지되었다. 더불어 사립학교 면세 혜택 철폐 같은 상류층 규제 정책도 보수 언론 및 유권자 반발로 추진이 어려웠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계층 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정치적 지형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Q: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 아닌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A: 많은 개혁 정책은 실행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좌초된다. 이는 개혁 대상이자 동시에 개혁을 방해하는 계층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계층은 자녀의 하향이동을 극도로 기피하며,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해 이를 저지한다. 이는 카너먼(Kahneman)의 '손실 회피' 개념과도 연관되며, 상류층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사회이동성 제고 정책은 사실상 하향이동 증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Goldthorpe는 이를 '코끼리를 방 안에 둔 채 외면하는 것'(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표현하며, 진정한 개혁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Q: 이상적인 개혁은 어떤 형태일 수 있는가?

A: Goldthorpe는 절대이동(absolute mobility)을 확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과거처럼 상위직군(예: 과학기술, 친환경 산업, 돌봄·보육 전문화)의 양적 확대를 통해 위로의 공간(room at the top)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이동(relative mobility)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불안정 고용 폐지 등 경제적 기반의 평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차도 자녀의 하향이동을 우려하는 중상류층의 저항을 피하기 어려우며, 정치적 연합의 구성과 지지기반 확보가 핵심 관건이다.

Q: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대학의 입시제도는 공정한가?

A: Goldthorpe는 명문대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A-level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사이에서 추첨제(lottery)를 도입해 입학기회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의 손녀는 런던의 평범한 종합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옥스퍼드의 주요 단과대학으로부터 면접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현재의 입시제도가 여전히 교육 및 계층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Q: 현재의 연구에서 교육은 절대적 지표보다 상대적 지표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교육은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이므로, 해당 사회 내 경쟁적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예컨대 전체 인구 중 10%만 대학 학위를 가진 경우 학위는 큰 경쟁력이 되지만, 40%가 대학 졸업자일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가 경쟁력을 대신한다. 따라서 교육의 가치는 절대적 수

	준이 아니라 인구 내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교육을 상대적 지표로 측정할 때 사회이동성 분석의 해석력이 향상된다. Q: 향후 연구 방향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A: Goldthorpe는 표준화된 조사자료(예: European Social Survey), 출생코호트 자료, 다층성장모형 등 고급 데이터를 활용한 세대 간 비교가 중요하다고 본다. 유럽을 북유럽-서중부-남유럽 세 블록으로 구분해 상대이동성과 교육효과, OED(Origin-Education-Destination) 모델을 분석하는 접근은 앞으로도 중요한 비교연구 틀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교육 외 경로를 통한 부모-자녀 간 지위 재생산 효과(직접효과)에 대한 탐색이 향후 쟁점이 될 것이다.	
④	인터뷰 4	
회의 개요	• 대상자: Rosa Alonso (Lead Analyst) Jonathan Smith (Senior Advisor) • 일시: 6월 19일 오후 1시반 • 장소: Social Mobility Commission (HM Treasury Building)	
회의 내용	Q: 영국 SMC(Social Mobility Commission)는 어떤 조직이며 왜 설립되었는가? A: SMC는 2010년 제정된 Child Poverty Act에 따라 설립된 법적 독립 자문기구로, 이후 Life Chances Ac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100%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만, 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 권고를 수행한다. SMC는 해마다 State of the Nation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분석을 통해 사회이동성의 변화와 그 원인을 추적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영국 내 다양한 지역, 계층, 배경 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다. Q: 왜 아동빈곤(child poverty)이라는 명칭이 이름에서 빠졌는가? A: 초기에는 아동빈곤과 사회이동성이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아 ‘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Commission’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회이동성이 단지 아동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적,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명칭에서 아동빈곤을 제외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기능 중복을 피하고,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의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도 작용했다. 결국 명칭 변경은 정책 범위의 확장성과 독립성을 반영한 결과였다. Q: SMC는 왜 행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인가? A: 사회이동성은 교육, 노동시장, 보건, 복지, 지역경제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주제이므로, 이를 단일 행정기구가 직접 실행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SMC는 정책 실행보다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정부 체계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과 규제기관(Regulators)도 있으나, SMC는 분석과 권고 중심의 비행정적 공공기관으로서 존재한다. 이는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다.	

	Q: SMC의 정책 제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A: SMC의 주요 정책 제안은 연례 보고서인 State of the Nation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다. 이 보고서는 현황 진단 중심이지만, 개별 주제를 다룬 정책보고서(Innovation Generation 등)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권고가 제시된다. 이러한 제안은 내부 분석 결과뿐 아니라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장관의 요청에 의해 특정 주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법적 권한도 있으며, SMC는 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정책 제안의 영향력은 공식 보고, 비공식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기반 권고를 통해 확산된다. Q: 정책 제안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A: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로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이 혼합되어 있다. 우선 공식적으로는 보고서가 의회에 상정되어 의원들과 논의되고, 정부 부처가 이를 참고해 정책을 조정하기도 한다. 비공식적으로는 SMC가 장관, 의원, 실무자들과 만나 자문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친다. 일부 제안은 정부 정책 문서나 국방부 등의 산업 전략 보고서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청년 실업, 보건 불평등, 지역 불균형과 관련해 SMC의 분석이 반영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근거 자료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Q: 영국 사회이동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A: SMC의 분석들에 따르면 사회이동성은 직업, 소득, 교육, 주거, 자산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및 주거 이동성에서의 정체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런던 및 남동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고소득 직업, 벤처 자본, 고등교육 접근성이 낮다. 또한 청년층의 니트(NEET) 상태와 건강 문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도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위원장은 이를 ‘복합적 불이익 집단(the truly disadvantaged)’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삶의 기회 부족이 현재 영국 사회이동성의 핵심 병목으로 진단된다. Q: 영국 사회이동성의 특이성은? A: 영국은 상대적 및 절대적 교육 이동성이 매우 높은 편이나, 소득과 주거 이동성은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육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숙련직 고용 기회의 집중, 수도권 중심의 투자 등은 영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SMC는 현재 국제비교 문헌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25년 State of the Nation 1장에서 이를 정리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은 강점, 주거와 소득은 약점이라는 이질적 구조가 영국 사회이동성의 주요 특성으로 분석된다. Q: 대중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A: SMC는 대중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에 자체 문항을 추가해 왔다. 이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이동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이동성의 핵심 요소로 직업이나 소득보다 건강, 행복, 교육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4년에는 자체 설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인식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관련 보고서는 2025년 가을에 발간될 예정이다.
--	--